

社說

대북전단금지법 이제야 위험, 현재의 文 정권 눈치 보기

문재인 정부가 만든 '대북전단금지법'은 위험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이 법은 2020년 6월 북한 김여정이에 대북 전단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하자 남북 이벤트에...

민 안전 우려'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고 했다. 법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것을 최고 사법기관들이 다 인정한 것이다. 이 법의 위헌성은 술하게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관들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했고, 미국·영국·유엔까지 비판과 우려를 쏟아냈다. 그런데도 문 정권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기고

이영선

연세대 명예교수 전 한림대 총장



교육에도 자유를 허가하라

과 다양성의 교육이 필수적이다. 더욱이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지금 학부모들의 자식에 대한 교육 욕구를 평준화의 틀로 대응한다는 것은 프로크루스트스의 침대와 다름없다. 교육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위해서는 교육의 자주성이 확립되어야 한다.

교육현장의 계속된 비극 문제의 뿌리는 평준화 학교선택권과 학생선발권 '바우처' 제도를 활용하자

교를 선택하고 이 증서를 등록금 대신 학교에 납부하며, 학교는 지원한 학생을 다양한 기준에 의거하여 선발하여 학생으로부터 받은 바우처를 정부에 제출하여 재정을 지원받게 된다. 한 학교에 지원자가 정원외를 초과해서 선발되지 못한 학생에게는 제2순위 혹은 제3순위 학교에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지원자가 정원에 미달한 학교는 점진적으로 구조조정의 과정을 밟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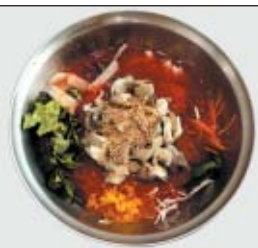
안타깝게도 교육의 현장에서 비극이 이어진다. 학부모들의 교사 괴롭힘은 물론 학생들의 교사 폭행과 망동은 교사들을 심리적 고통으로 내몰고 있다. 교실의 분위기를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라 교육 노동자와 피동적 학생의 관계로 전락되어 나타난 현상이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 교사와 학생의 만남이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 비자발적 강요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는 교육청이 배치하는 학생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학생은 교육청이 가르는 학교에 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학교는 학생들에게 교육부가 정해 놓은 교과과정을 가르치기만 하면 된다. 애써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킬 필요도 없으며 그들의 인격도모에는 더더욱 신경 쓸 필요가 없다. 학생들도 학교에서는 정작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없으니 그저 시간만 때우면 된다. 선생님의 훈육과 간섭은 거부의 대상일 뿐이다. 문제의 발단은 평준화이다. 이 정책은 학교의 사멸화와 사교육의 폐해를 막겠다고 교육의 자주성을 말살해 버렸다. 산업화의 시대에는 교육의 평준화가 필요했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 같은 정보화와 문화의 시대에는 창의성

김준의 맛과 성 [157]

웅진군 모도 소라물회

소라는 갯벌이 발달한 서해안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사전에서는 '피떡고동'이라 하지만 주민들은 소라나 참소라라고 부른다. 그런데 사전에 등장하는 소라는 제주도나 남해안의 해녀들이 채취하는 빨소라를 말한다. 빨소라는 암조지대에 서식하며 해조류를 먹고 자라지만, 참소라는 갯벌에서 사체나 유기물, 조개류 등을 먹고 자라는 육식생물이다. 인천광역시 웅진군 북도면 모도의 한 식당에서 참소라 전문점을 만났다. 소라찜, 돼밥(비빔밥), 무침, 물회 등 '참소라 한상'을 차려내는 식당이다. 소라물회를 주문했다. 모도는 시도, 신도와 더불어 '신시모도'라 부르는 삼형제섬이다. 세 섬은 다리로 이어져 있으며, 최근에는 영종도와 연도교 사업이 진행

중이다. 모도와 시도 사이 갯골은 저서어로 유명했던 어장이었다. 지금은 모 습을 볼 수 없지만 해선망이라는 무동력선을 이용해 저서어를 잡았다. 모도에서 강화도로 이어지는 갯벌에는 참소라가 많다. 참소라는 불과 가을에 형성이나 통발, 맨손으로 잡는다. 형망은 수심 10m 내의 깊이에서 바다를 굽어 잡는다. 통발은 고등어 등 미끼를 넣은 통발을 하루 이틀 전 바다에 넣어 두었다가 잡는다. 또 물이 빠진 조간대의 갯벌이나 바위 틈에서 줍는 맨손어업도 있다. 여행객들이 바닷물이 빠지면 불을 켜고 소라 등을 줍는 해루질도 있다. 소라는 숙회, 죽, 무침, 젓갈 그리고 물회 등 다양하게 이용한다. 물회는 육수가 맛을 결정한다. 집집마다 맛이 다르듯이 육수도 가게마다 다르다. 참소라는 어떻게 요리를 하든 잘 삶는 것이 먼저다. 된장을 풀어 비린내를 잡고, 식감이 부드럽게 너무 삶지 않아야 한다. 삶은 소라에서 꼭 제거해야 하는 것이 푸른색의 내장이다. 가장 쉽게 많이 만들어 먹는 방법이 숙회나 무침이다. 비빔밥은 갖은 채소에 소라살을 얹으면 되지만, 소라물회는 육수를 만들어야 하기에 번거롭다. 참소라 외에도 간짜미, 꽃게, 생굴, 낙지 등 계절에 따라 갯벌에서 나는 것을 만날 수 있다. 전남대 학술연구교수



심상치 않은 집값, '충분한 주택 공급'에 의구심 생기면 안 돼

서울과 수도권 집값 오름세가 계속되자 정부가 3기 신도시 물량 추가 공급, 부동산 PF 보증 확대 등의 공급 확대 대책을 내놓았다. 자체 집값 인상, 고금리 등으로 인한 민간 건설 부문 위축을 공공역할 확대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집값이 다시 오르고, 주택 담보 대출이 급증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다시 위험해지고 있다. 향후 몇 년간 신규 주택 공급이 모자랄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 불안감이 더 커질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의 9월 셋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0.1%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값은 18주 연속 오름세다. 지난해 금리 인상은 아파트 가격이 줄곧 떨어지는 추세였지만, 올 들어 이 흐름이 뒤집혔다. 한국은행의 주택가격전망지수도 10개월 연속 상승했다. 1년 뒤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많다는 뜻이다. 그러자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 주택 구입에 뛰어드는 양상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 젊은 층의 '영끌 투자'도 심상치 않다. 집값 상승은 특례보증자리론 등 정부가 부분적으로 대출을 풀

어준 탓이지만, 주택 공급이 제대로 안 될 것이란 예측이 퍼지는 것도 한 원인이다. 올 상반기 주택 인허가 및 착공 물량은 전년 대비 각각 27%, 51% 감소했다. 비정상적 집값 상승에 배팅하려는 사람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뜻이다. 주택은 특성상 단시간 내에 공급될 수 없기 때문에 공급과 수요의 괴리가 지속되면 계속 집값을 밀어올려 부동산 거품을 일으킬 수 있다. 모기지 금리가 7% 이상 고공행진을 하는 미국의 집값이 코로나 이전 대비 50% 가까이 급등한 것도 공급 부족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은 심리적 요소가 큰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된다는 지속적인 신호를 주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정부의 공급 대책은 무엇보다 시간표를 지켜야 한다. 당초 3기 신도시 아파트는 2025~2026년이면 입주한다고 했지만 이미 1~2년 늦어졌다. 정부 계획대로 주택 청약과 입주가 진행돼야 집값 오름세가 심리가 사라진다. 국회에 장기 계획 중인 재건축추진과이익환수법, 주택법, 노후계획도시특별법도 신속히 통과돼야 한다.

법 무시하며 혁신 기업 8년간 괴롭힌 변협, 사실상 편든 법무부

법무부가 26일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했다가 대한변호사협회 징계를 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징계 결정을 취소했다. 통상 이의 신청은 3개월 내에 결론을 내야 하는데, 법무부는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석 달 이상 징계위원 열지 않더니 겨우 열린 징계위도 3차 심의까지 잘질 끌었다. 이미 현재와 법원 이이 징계가 부당하다고 한 지 오래됐다. 그런데도 법무부가 당연한 징계 취소를 하는 데 10개월이 걸렸다.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무부 변화와 한동훈 의식을 드러낸 것이라니 의심을 받을 만하다. 로톡은 변호사를 소비자와 연결해 주는 법률 플랫폼이다. 소비자들은 로톡 사이트에 들어가 본인이 원하는 변호사를 선택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변협은 이를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것이라 여겼다. 2015년 로톡을 불법이라며 고발했지만 경찰은 '혐의 없음',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자 변협은 2021년 법률 플랫폼 이용을 규제하는 내부 광고 규정을 만들고, 이를 근거로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을 징계했다.

하지만 2022년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의 법률 플랫폼 가입을 금지한 변협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올 4월에 공정위가 로톡 이용을 금지한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법정 최고 과징금 10억원을 각각 부과했다. 그런데도 누구보다 법을 존중해야 할 이들 변호사단체는 현재 결정도 무시한 채 징계 취소를 거부하며 버티었다. 그러는 사이 로톡은 회원 변호사 급감으로 경영난에 빠졌고 결국 사옥을 매각하고 직원을 절반으로 줄여야 했다. 고사 직전까지 내몰린 것이다. 어쩌면 법무부는 로톡이 어떻게 없어질 때까지 징계 취소 결정을 미루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로톡과 '타다'의 사례는 우리 사회의 기득권 벽이 얼마나 두꺼운지를 보여준다. 한국 사회엔 혁신하며 노력하지 않고 자격증 한 장을 무기 삼아 버티려는 직군이 적지 않다. 한국이 로톡을 고사시키려 8년을 보내는 사이, 선진국에선 검색이 하나만으로 판례를 찾아주는 서비스, AI를 활용한 법률 자문까지 선보이며 이른바 리걸 테크(legal-tech) 산업이 만개하고 있다.

민주당에 불어닥친 파시즘... 숙청·공포·중우정치 광란

강도(強度) 낮은 혁명으로 대한민국 흔들고 | 강도(強度) 낮은 '숙청'으로 당내 비판자 몰아내고 | ★ 프랑스 자코뱅 공포정치 ★ 소련 스탈린 숙청 ★ 중공 모택동 문화혁명과 비수

류근일 칼럼 체포동의 가결 ③

날로 흉포해지는 [이재명 현상]

이재명 구속은 상식 그 자체다. 증거가 차고 넘친다. 증거인멸 우려도 충분하다. 그런데도 그를 싸고도는 이재명 현상은 공포(恐懼)하기만 하다. 이견 Δ 민주주의의 아니고 Δ 범죄의 아니고 Δ 진보도 아니다. ▲ 중우(衆愚)정치 ▲ 폭민(暴民) 정치 ▲ 과격파 일당독재 ▲ 공포정치일 뿐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나는 이재명 구속 동의안에 부(否)표를 던졌다"라는 것을 인증받으며, 자신들의 기표(記票)자를 사진 찍어 공개했다. 이재명 측은 "구속 동의안에 가(可) 표를 던진 의원들을 색출해 조치하겠다"라고 공갈쳤다. 이재명 열성 지지자들은 '수박'을 살해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반(反) 이재명 의원들은 사퇴 압박을 받고 당직에서 물러났다. 극단 과격파의 쿠데타였다. 친(親) 이재명 당권파는 사법부 권위에도 심리적 부담을 안겨 주었다. 이재명 구속 여부 심리를 맡은 유창훈 판사에게 100만 명 석방 탄원서를 제출하라고 다그쳤다. 이쯤 되면 그건 탄원이 아니라 압박이다.

프랑스 자코뱅당의 '피바다' 공포정치

강경파 독주는 프랑스 혁명 때도 있었다. 혁명 직후 프랑스 국민의회에선 온건파 <지롱드당>과 과격파 <자코뱅당>이 대립했다. <지롱드당>은 <자코뱅당>의 루이 16세 국왕 처형에 반

대했다. 빵 등 생필품 가격 상한 제도 반대했다. 이 싸움은 결국 <자코뱅당>의 <공포정치>로 귀결했다.

소련 스탈린의 '피바다' 대숙청

소련의 불세비키 혁명도 스탈린 독재로 귀결했다. 스탈린은 1936~1938년 사이에 자신의 비판자들을 ▲ 인민의 적 ▲ 오일(五列) ▲ 파괴 공작 등 온갖 날조된 죄목을 붙여 [숙청]했다. 75만 명이 살해당하고, 1백만 명은 시베리아 수용소로 유배되었다.

중공 모택동의 '피바다' 문화혁명

중공의 마오쩌둥은 1958~1961년에 자신이 일으킨 대약진 운동에서 처참하게 실패했다. 2억인구 루샤오치(劉少奇)가 그것을 '개인(마오쩌둥)의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마오쩌둥은 10대 홍위병들을 동원해 비판자들을 '주사파(走資派, 자본주의로 가려는 자)'들이란 죄목으로 제거했다. 이게 1966~1976년의 문화혁명이었다.

이재명 일당의 저강도 [숙청극]

이재명 일당은 반문할 것이다. "우리가 하는 게 어떻게 자코뱅 공포정치, 스탈린 숙청, 마오쩌둥 문화혁명과 같으냐?" 물론 시시콜콜 같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큰 틀의 발상이 비슷하지 않은가 불응이다.

○ 당내 다른 의견을 '수박'이라 낙인찍는 게 우선 비슷하

다. '수박'이란 가짜란 뜻이다. 좌파를 해도 꼭 자기들처럼 해야 진짜이지, 다른 방식으로 하면 가짜라는 마녀사냥이다.

○ 광선적인 팬덤 떼가 날뛰는 것도 같다.

민주당과 극단 운동권은 결국, 한편으로는 낮은 강도(強度)의 혁명으로 자유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다. 그리고 또 한 편으로는 낮은 강도(強度)의 [숙청극]으로 당내 이견(異見)을 탄압하고 있다.

비 이재명계, 당내 노선투쟁 피하지 말라

그렇다면 비(非) 이재명 계는 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자유 진영은 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비(非)이재명계는 ▲ 조폭 좌파 ▲ 반디(bandit, 山賊) 좌파 ▲ 상층 거짓말 좌파 ▲ 상층 막달고함질 좌파 ▲ 상층 범죄형 좌파와 결별하고, [지성적 좌파를] 지향해야 할 때다. 무엇을 주저하는가? 치열한 내부 노선투쟁을 피하지 말아야 한다.

자유진영, 윤 대통령 이념투쟁에 힘 실어라

자유인들도 그런 사이버 저질 좌파와 강하게 싸우는 것을 '극우'라 몰아치는 내부 기회주의를 단호히 맞받아쳐야 한다. 국민의힘부터가 그런 기회주의로 처신해 왔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주사파는 진보 아니다' '반(反) 국가 세력과는 협치 없다'라고 분명히 말했다. 국민의힘 안팎의 [철학 없는 속류(俗流)와] 사투 다른 말이다.

뉴데일리 newdaily.co.kr